

‘AI 국가’ 총력전… GPU·데이터에 내년 예산 9.4조 쏟아붓는다

오늘 AI

AI 컴퓨팅 자원 확충에 3.8조 투입
‘베라 루빈’급 GPU 약 1만장 확보
‘모두의 AI’에 예산 2500억 편성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투입하는 9조4211억원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전체 AI 예산 10원 가운데 4원꼴이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 확보에 투입되고, 국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데도 처음으로 2500억원이 들어간다.

28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도 AI 대전환 예산은 올해 5조938억원보다 84.9% 증가했다.

정부는 GPU와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독자 AI 모델 개발과 인재 양성, 전 국민 AI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영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AI 국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투입하는 9조4211억원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사진은 AI가 만든 이미지.

◆AI 예산 41% GPU로…데이터는 26배 확대

가장 많은 돈이 물리는 곳은 GPU다.

정부는 AI 컴퓨팅 자원 확충에 올해 2조841억원에서 내년 3조850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AI 대전환 예산의 약 41%다. 이를 통해 최신 ‘베라 루빈’급 GPU 약 1만장을 확보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최상위 AI 모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학습의 핵심인 데이터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은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약 26.7배 확대된다. 약 1조 톤 규모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도 프론티어급 AI 개발 체계로 확대·재편한다. AI데이터센터와 퍼지컬 AI, 차세대

반도체를 묶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7956억원을 투입한다.

국회 심사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확보한 GPU와 데이터가 실제 국산 AI 모델의 성능과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GPU를 기업과 연구기관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도 관건이다.

◆전 국민 AI에 2500억…무료 서비스 실효성은

내년 처음 시작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이른바 ‘모두의 AI’에는 2500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누구나 국산 범용 AI 챗봇과 AI 에이전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SK텔레콤과 카카오, KT가 각각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AI를 개발자와 기업의 생산 도구를 넘어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국산 AI 서비스의 초기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가 민간 AI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만큼 2500억원을 투입

해 실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이 국회 심사와 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9.4조 ‘AI 국가’ 승부수…이제 국회로

정부가 AI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AI 경쟁이 기업을 넘어 국가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관건은 투자 효과다. GPU 1만장과 1조 톤 규모 데이터가 경쟁력 있는 국산 AI 모델로 이어지고, ‘모두의 AI’가 일회성 무료 서비스를 넘어 국내 AI 생태계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가 9조4000억원대 투자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부가 던진 ‘AI 국가’ 승부수는 이제 국회의 검증을 앞두고 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제 투자의 필요성과 함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서울 통신비 세계 최고?… 업계 “비교 오류” LGU+, IBCT와 ‘카테나-X’ 공동사업 출범

일본 총무성 조사결과서 1위 기록 韓 통신업계 “구형 요금제 적용”

‘서울 통신비가 뉴욕보다 비싸다’는 일본 총무성의 비교 조사 결과를 두고 국내 통신업계가 비교 기준을 정면 반박했다. 한국은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가 아닌 구형 고가 요금제를 적용한 반면, 일본은 필수 통신요금을 제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통신 환경을 반영한 객관적인 국제 요금 비교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전날 일본 총무성의 국제 통신요금 비교 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일본 총무성은 서울과 일본 도쿄, 미국 뉴욕 등 6개 도시의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장 저렴한 요금제 브랜드를 조사했다. 그 결과, 4세대 이동통신 20GB·50GB 기준 소비자 지불액은 서울이 약 5만9600원(6919엔)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에 KTOA는 통계의 신뢰성을 들어 한국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4G·5G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만 2000원대 요금제(월 20GB 기준)가 있는데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도 총무성은 과거의 비싼 6만9000원대 구형 요금제를 대입했다고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요금 산출 과정에서 최소 2만원(2178엔)에 달하는 통신비 외곽이 발생한 점도 짚었다. 조사 대상 6개국 중 일본은 유일하게 기본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을 포함하지 않고, 쓴 만큼 요금을 추가하는 ‘종량 과금 체계’를 유지 중이다. 따라서 음성 무제한 부가서비스와 문자 서비스 요금을 합산한 기준을 적용해 다시 요금제 수준을 평가하면 한국은 3~4위 수준인 중위권으로 낮아진다.

KTOA는 앞서 국내 통신요금 수준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최근 발표한 ‘이동통신 가이

드북 2026’에서 KTOA는 가입자들이 통신비 부담을 체감하는 요인으로 단말기 고가화와 OTT 구독료 인상을 꼽았다. 통신 3사는 OTT 결합 무제한 요금제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데다, 매달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까지 묶여 청구되면서 체감 통신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공동화 조사를 제시했다. 지난해 통신 서비스 지출은 2012년 대비 21% 감소한 반면 콘텐츠 이용료는 83% 증가했다.

특히 고화질 영상 등 콘텐츠 이용 비중이 늘면서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해 143만 TB로 26배 증가했다. 그러나 데이터 사용량 대비 통신요금 지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했다. 또 모바일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위 미국의 뒤를 이었지만, 5G 요금제는 미국·일본 등 OECD 10개국 중 3번째로 저렴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들은 정부 주도로 LTE·5G를 통합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통신사들은 인플레이션과 전기료,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자동차 기업 유럽 수출 지원

LG유플러스가 국내 자동차 협력사들의 유럽 수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 아이비씨티(IBCT)와 ‘카테나-X’ 사업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공동사업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카테나-X는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동차 사업 전용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다.

카테나-X에 참여하면 각자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에 관련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IBCT가 서비스 제휴 중이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유럽 공급망 강화가 있다. 최근 제품의 생산 이력, 원재료 조달 정보,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유럽 현지 기업과 거래하려는 국내 제조기업도 기준에 부합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양사는 카테나-X 도입을 희망하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카테나-X 사업 공동사업 출범식’에서 권근섭 LG유플러스 고객그룹담당(오른쪽)과 이정문 IBCT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는 기업을 위해 도입 상담, 가입, 시스템 구축, 인프라 제공, 서비스 운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사업 체계를 출범할 계획이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카테나-X 참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요구하는 데이터 관리 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BCT는 국내 기업의 카테나-X 가입과 온보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msjo@

KT, 글로벌 국방통신 표준화 논의 참여

국내 통신사 최초로 전문가 파견

KT가 글로벌 행사에서 국내 최초로 국방 통신 표준화 논의에 나서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통신 표준화 프로젝트 9차 회의에 5G·6G 표준화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주관으로 내달 2일까지 서울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다. 국내외 국방·정부기관 관계자와 통신·표준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국방통신 표준화 프로젝트(NWCSP)는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 관계자들이 모여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과 표준화를 논의하는 민군 협력 프로젝트다. 연 3회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ICT 표준화기관인 TTA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KT는 이번 9차 회의부터 5G·6G 표준화 전문가를 파견해 활동을 시작한다. 차세대 국방 통신 표준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통신사로 KT가 최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 5G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구축 경험을 참여기관들과 공유한다. 특히 상용 5G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5G·6G 기반 국방통신 기술의 도입 지침 마련과 차세대 국방통신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국의 5G·6G 기술 개발 및 국방 분야 적용 현황을 공유하고, 위성통신과 무선백홀 등 최신 통신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표준 문서를 검토한다.

/조민선 기자

정신아·김도영 공동의장 선임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앞두고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공동의장 체제로 전환한다. 정신아 의장과 김도영 카카오 X 대표 내정자가 함께 그룹 주요 의사결정을 맡으며 분할 과정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그룹은 28일 그룹협의회를 열고 협약사 최고경영자들의 결의에 따라 김도영 카카오톡 대표 내정자를 CA협의체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정신아 의장과 함께 CA협의체를 이끌게 된다. 두 의장

은 인적분할 전까지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계열사 간 조율과 분할 준비 과정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공동의장 체제 전환은 인적분할을 앞두고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는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과 사업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실무 차원의 분할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기술과 재무, 인사 등 주요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분야별 실무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